

피코·수미다 '원정투쟁' 노동운동 새 전기

'90여성계 10대뉴스

90년의 여성계는 큰 성과는 없었지만 택아법의 독립 입법화·세법 개정 등 법제정, 남녀고용평등법 실현을 위한 노력 등이 돋보인 한 해였다. 여성계 10대 뉴스를 주요 흐름별로 정리해본다. <편집자>

택아법 반대운동 일دت

◇날치기 통과된 택아법

지난 18일 국회에서 민자당 찬성만으로 날치기 통과된 영유아 보육법은 △법정 영세민 자녀에 대해서만 국가가 택아비용을 지원하고 △시설, 종사자 기준에 미달될 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며 △서울과 지방에 보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획일적으로 통제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 여성계·탁아관련단체·유아교육학회·평민당 등이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90년의 택아법쟁취운동이 91년엔 영유아 보육법 반대운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.

수미다, 2백38일 농성

◇여성 노동자 해외원정시위

다국적 기업인 한국피코·수미다전기·웨스트팩은행 노조대표들이 미국·일본·오스트레일리아 본사로 회사 대표를 찾아가 일방적 폐업과 해고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린 해외원정 시위는 여성노동운동의 새 전기를 이뤘다. 수미다전기 노조위원장 정현숙(25)씨 등 4명은 89년 11월 14일부터 도쿄 시내 한복판에 텐트를 치고 2백38일동안 단식 등 투쟁을 벌인 끝에 지난 6월8일 밀린 임금·퇴직금·보상금 등을 받아냈다. 두차레나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한국피코 노조위원장 유점순(36)씨 등 3명의 원정시위는 결론을 얻어내지 못했으나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미국법률단체인 헌법권리단체(CCR)가 피코문제를 정식으로 맡게하는 개가를 올렸다.

단체협상 결렬로 지난 9월14일 파업에 들어갔던 웨스트팩은행의 김선현(31) 노조위원장 등 2명도 지난 3일 오스트레일리아 본사로 건너가 관계자들을 만나 빠른 시일안에 협상을 마무리지을 것을 촉구, 타결이 임박하는 등 여성노동자들의 해외원정은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.

고용평등 보완시급

◇남녀고용평등법 위반 4개기업 체 약식기소

응시자격을 남자로 한정해 사원모집광고를 내 서울지역 여대생 대표자협의회에 의해 서울지검에 고발된 신도리코(주) 등 4개 기업이 지난 3월23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돼 벌금 1백만원형을 받았다.

검찰이 4개 기업을 남녀고용



도쿄 시내 한 복판에 텐트를 치고 2백38일 동안 폐업·해고철폐를 요구하며 단식 등 투쟁을 벌여 온 일본인 투자기업 수미다전기의 여성노동자 4명은 밀린 임금·퇴직금·보상금을 받아냈다.

다국적기업 불법행위 세계에 알린 계기 마련 신도리코등 '고용평등법' 위반 약식기소 눈길

주부, 사회관심 높아

◇주부운동 확산

여성민주회·또 하나의 문화 등 여성단체들이 주부들의 깨어있는 의식을 위한 주부강좌를 부지런히 마련한 것도 올해의 두드러진 특징이다. 주부 강좌는 '주부운동'이라는 새로운 낱말을 탄생시켰고, 주부들의 사회에 대한 관심은 교육·소비자·공해추방·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시민운동 등으로 확산되었다.

여성전담부 역할 기대

◇정무제2장관실, 여성전담부서로

11월 확정된 정부 각 부처의 기능조정작업으로 정무제2장관실이 여성정책 총괄·조정기능에 덧붙여 집행력도 부여받아 91년부터 실질적인 여성부 역할을 하게 되었다. 이에따라 그동안 보사부의 지휘·감독을 받아온 여성개발원의 관장기관이 보사부서 정무제2장관실로 이관된다.

여성 정치교육 늘어

◇여성의 정치참여요구 높아져
여성의 정치참여율이 1.6%밖에 안되는 현실 아래서 올해는 여성들의 정치참여 요구가 크게

두드러졌던 한해로 기록될만하다. 여성의 의회진출을 위해 평민당과 여성단체연합은 비례대표제를, 여성유권자 연맹 한국부인회 등은 20% 여성할당제를 요구하는 등 국회를 겨냥한 여성계의 움직임이 활발했으나 민자당의 비례대표제·여성할당제 거부로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. 지자체 실시를 앞두고 여성개발원·여성정치문화연구소·한양대 부설 지방자치연구소 등이 여성을 위한 정치교육을 폈다.

40년 역사그늘 파헤쳐

◇정신대 문제 재조명

교회여성연합회·정신대연구회 등 37개 여성단체는 지난 10월17일 일본 정부에 40여년동안 역사의 그늘 속에 가리워져 있던 정신대 문제의 진상을 조사, 공식사과와 유족에 배상할 것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. 일본 정부에 정신대 문제를 공식식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, 이들은 일본 여성단체와 연대해 정신대문제 진상규명을 해나기로 했다.

세법개정 운동 활발

◇개정가족법 후속조치 활발
89년 12월 극적으로 통과된

개정 가족법의 91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여성계가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분야는 세법개정문제였다.

여성개발원·가정법률상담소가 6, 8월에 개정가족법의 후속조치 중 세법 개정을 주요 이슈로 제기했고, 여성 민주회는 주부 8백여명을 대상으로 '가사노동의 가치와 개정세법에 대한 의식조사'를 실시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회 재무위에 여성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. 이 결과 배우자 공제액이 1억원+(결혼연수×6백만원)으로 조정되긴 했으나 △배우자 상속제 완전폐지 △이혼시 분할재산 비과세 △혼인중 배우자간의 증여 공제액 확대 △사별특별공제 신설 등 여성계의 요구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.

여성학 박사 배출 길터

◇여성학 박사과정 신설

이화여대 대학원에 91년부터 여성학 박사과정이 신설된다. 이로써 국내 여성학 박사 배출의 길이 트이고, 교양과목만으로는 여성학 강의를 들던 학부학생들도 여성학을 부전공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전공제 실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.